

바이오기술 보안체제 무너졌다!

P제약 단백질 체세포 전송기술 유출 ... 혈세 수십억원 줄줄이

국가경제를 떠받칠 차세대 핵심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첨단 바이오기술(BT)이 보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 대책이 요구된다.

검찰에 적발된 P제약의 중질환 치료용 단백질의 체세포 전송기술(MITT) 유출 사건은 현재 BT 분야의 기술보안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1월16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따르면, P사에서 MITT연구실장과 신약개발실장을 지낸 서모 박사는 6월 신약개발을 책임지고 있던 최모씨한테서 MITT 관련자료를 통째로 넘겨받았다.

최씨가 넘긴 자료는 MITT 기법 및 비임상시험(동물 독성실험) 자료와 실험데이터 등이 기재된 연구노트 등이었는데 자체만으로 특허신청이 가능한 핵심기술 자료도 다수 있었다.

P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MITT는 자연단백질을 체내 질병세포에 침투시켜 각종 난치병을 치료하는 개념의 기술로, 합성 의약품과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어 차세대 신약으로 주목받는 바이오 의약품 제조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해당기술을 상용화하면 천문학적인 국부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한국 최초의 노벨의학상까지 노려볼 만하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P사의 보안시스템은 세계가 주목하는 MITT의 기술적 가치와 비해 허술해 최씨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MITT 관련 핵심 자료들을 개인 이메일 계정을 이용해 서씨에게 전송했으며,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자료를 담아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도 했다.

통상 기밀자료는 다운로드 자체를 차단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할 수 없게 보안장치를 갖추어 놓는데 기본적인 보안시스템이 미비했다는 것이다.

MITT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수십억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한 정부도 기술유출에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관계 부처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을 통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안교육만 했을 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 점검은 거의 하지 않아 기술이 외국으로 넘어갔다면 엄청난 규모의 유·무형적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첨단기술 개발기업들은 통상 전문 연구인력만으로 구성돼 보안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P사 관계자는 “첨단 보안장비를 갖추어도 내부 핵심 연구인력이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기술유출 시도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유출 시도를 조기에 감지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모든 자료가 회수돼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17>